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6년 5월 8일(금)		
보도일시	(온라인) 5월 10일(일) 12시 (지 면) 5월 11일(월) 조간		
상세문의	재정통계연구실	조성은 연구위원	☎044-287-8226
	재정통계연구실	현옥주 연구원	☎044-287-8404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	이혜선	☎044-287-8345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044-287-8015
분 량	총 3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지원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트렌드 분석 결과 배포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가 중앙정부 사각지대 메우는 '정책 실험실' 역할 확인
- 플랫폼 노동자·발달장애인 등 제도 밖 소외계층 발굴, 중앙정부 사회안전망 보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지원단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BRIEF」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 목적은 지자체의 신규 사회보장 수요 발굴 및 확산을 돕고, 대정부·대지자체·대국민 대상 사전협의제도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보사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이하 사전협의제도)'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지원단(이하 협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 자료집(브리프)은 지난 6년간('20~'25)의 협의 데이터와 2025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물이다.
- 분석 자료집(브리프)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현황과 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주기로 발행하여 최신의 현황 자료와 트렌드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정례화할 예정이다.

□ **사전협의 건수 지속 증가, 주민 밀착형 ‘기초지자체’가 주도**

이번 분석에 따르면, 사전협의 접수 건수는 2020년 1,088건에서 2025년 1,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 77%에 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복지 수요가 활발하게 발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5년 협의 사업 주요 트렌드: 사각지대 보완하는 ‘정책 실험장(테스트베드)’**
지자체는 중앙정부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선제적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전국적 확산**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73개 사업이 신설되며 가장 활발히 확산 중으로 과거 폐렴구균 사례처럼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은 영국·미국 등 주요국 추세와 맞물려, 향후 대상포진의 국가 제도화를 이끄는 중요한 정책 신호로 분석된다.

② **[노동·복지]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사업이 12개로 급증(6개 광역시·도)하며 복지 무게중심이 신(新)노동 취약계층으로 이동이 확인되었다. ‘보험료 보조+작업안전 지원’ 복합 방식(모델)을 통해 중앙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인구·형평] 사회적 포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28건)은 ‘사회적 포용’으로의 인식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32건)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확인하였다. 전국적 동조화가 확인된 두 사업은 2026년부터 ‘협의 제외’ 대상으로 편입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 건강보험 제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 확대가 국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①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제도 설계**

플랫폼 노동의 ‘초지역성’이나 대상포진·간병비와 같은 전국적 수요가 확인된

사업은 지자체 단위의 대응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급여화 및 보험료 부담 구조 재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② 보장성 강화와 재정 효율성의 균형

지자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82개 사업)은 사각지대 완화 효과가 있으나, 의료 과다이용(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인부담 하한선 설정 등 정교한 설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실증적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③ 지역 간 복지 격차 점검(모니터링)

재정 자립도 및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규모와 혜택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거주지에 따른 과도한 복지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 보사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및 협의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신영석 원장(보사연)은 “사전협의제도는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포착하는 ‘정책 수요 탐지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협의지원단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창의적 복지 실험이 체계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